

이슈브리프 906호
(2026. 9.29)

젤렌스키의 전격적인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발표: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제906호

장세호 sohill@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당초 양국 실무선에서 당사자 신변과 외교·안보적 파장을 감안해 비공개로 조용히 처리하기로 양해했던 사안이 다자외교의 최고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서울과 키이우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 밀착의 야만성과 자국의 인권 규범 준수를 대비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태평양 안보를 연계하여 국제적 지원 동력을 재결집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복합적 계산 하에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국 야권은 대북·대러 굴종 외교이자 외교 참사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초기 비공개 방침은 포로와 북한 내 유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용한 인도주의 외교의 본령이자 정밀한 안보 자산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본 글은 젤렌스키의 전격 발표 배경과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 논리를 평가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와 대러/대우크라이나 외교에서 견지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키워드: 북한군 포로, 젤렌스키, 유엔총회, 비공개 양해, 정보 자산화, 한반도 정세 관리

2026년 9월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했다고 전격 공개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전선 투입 사실은 이미 공인된 상황이다. 하지만 생포된 북한군 정규군 포로가 제3국이 아닌 서울 땅을 밟았다는 소식은 즉각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여러 파장을 초래했다.

먼저,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외교적 마찰이 표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적 민감성과 당사자 신변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 전격 공개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사전 ‘비공개 양해’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해 공식 해명과 사과·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내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이 사안의 비공개 합의의 소극성과 대북/대러 눈치 보기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잘루즈니 주영 대사 측근 등은 “한국과의 중장기적 협력 카드를 젤렌스키가 일회성 홍보 쇼를 위해 날려버렸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극도로 민감한 안보·인권 현안이 국가 간 신의를 넘어 정치적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으로 변질된 현 상황은 여러 층위의 질문을 던진다. 이에 본 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외교적 파장을 무릅쓰고 유엔 무대에서 이를 전격 공개한 배경과 그 결과를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을 평가하면서, 향후 엄중한 국제·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책적 지향과 과제를 짚어본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을 공개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선택

외교 관례상 포로의 제3국 인도나 귀순자 처리는 당사국들이 고도 보안 속에 ‘로키(Low-key)’로 진행하는 것이 상례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가 사전 신사협정을 깨고 유엔총회 연설이라는 최대 다자 외교 무대를 폭로의 장으로 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북한 연대의 비인도적 실체 폭로와 자국의 문명국 이미지 극대화다. 젤렌스키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생포 당시 한 병사가 자살을 기도했던 극단적인 사례를 여과 없이 소개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을 ‘총알받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사상적으로 세뇌·착취하고 있다는 야만성을 고발하려는 목적의 발언이었다. 반대로 이 언급은 그런 포로조차 살려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인도한 우크라이나를 ‘제네바 협약과 인권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유민주주의 문명국’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키려는 고도의 이미지 정치였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 희석과 관심 환기다. 장기화된 소모전과 중동 정세의 격화 속에서 서방의 전쟁 피로감이 꾸준히 증대되고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북한군 포로라는 ‘살아있는 물증’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이 더 이상 동부 유럽의 국지적 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위협과 결합된 세계적(또는 세계화된) 전장임을 입증코자 했다. 즉,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안보가 동조화되어 있음을 유엔 무대에서 각인시켜 서방과 아시아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와 군사·재정적 지원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외교적 지렛대 확보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살상무기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견지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론화함으로써, 한국을 이번 전쟁의 사실상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 결박함으로써 군사·재정적 지원을 확대코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주의적 명분으로 포로를 넘겨받은 한국 정부를 향해 향후 방공 자산과 탄약·포탄 등 실질적인 무기 지원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정치적 압박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 셈이다.

넷째, 국내적 반발의 사전 차단과 정치적 치적화다.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는 절대적 병력 부족 상황에서 러시아에 억류된 자국 군인 한 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들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와의 1:1 또는 1:다수 포로 맞교환 카드로 쓰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는 결정은 전쟁 중인 자국민과 군 내부로부터 거센 비판을 부를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었다. 동 맥락에서 젤렌스키가 이 사안을 ‘밀실 거래’가 아닌 ‘국제 규범에 따른 당당한 외교적 성과’로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국내 정적들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순간의 스포트라이트’에 대한 집착이 낳은 전략적 실패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뜻밖의 승부수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의도했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자국의 외교·안보적 입지만 좁히는 참담한 역풍으로 귀결된 것 같다.

첫째, 핵심 잠재 지원국인 한국과의 외교적 신뢰 손상과 지원 동결 리스크를 자초했다. 젤렌스키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을 압박해 군사적·재정적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 비밀

합의를 파기당한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 국회와 여론에서도 “최소한의 신의조차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한 반발 기류가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장 절실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산 방공망과 재래식 소모성 무기의 획득 가능성을 제 발로 걷어찬 셈이 됐다.

둘째, 우크라이나 내부 권력 투쟁 격화와 정권의 외교적 미숙함이 노출됐다. 잘루즈니 대사의 미디어 고문 등이 즉각 “포로 문제는 한국과의 더 큰 전략적 협력(방산·경제)을 위한 물밑 패키지 협상 카드였는데, 젤렌스키가 일회성 홍보 쇼를 위해 날려버렸다”고 직격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대통령실 보좌관이 직접 나서 댓글로 선전을 벌일 만큼 이 사안을 매개로 한 우크라이나 내부 갈등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 결국,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여러 국내적 갈등 증폭 국면 속에서 이 사안을 통해 다시금 전략적 조급증과 미숙한 국정 운영 실태를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노출하고 말았다.

셋째, 러시아에 ‘갈라치기’ 선전전 명분을 헌납했다. 우크라이나의 전격 공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현재 우크라이나가 의도했던 러시아의 불법 침략과 북러 야합 규탄이라는 국제적 초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한국 내부의 정쟁과 대통령의 발언 맥락을 교묘히 비틀어 “한국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살인자·배신자라고 부르며 격분했다”는 식의 대대적인 왜곡 선전을 펼쳤다. 우크라이나의 돌출 행동이 되레 반러 연대의 균열을 선전하려는 러시아 측에 가장 훌륭한 먹잇감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유엔총회 연설에서의 ‘찰나의 헤드라인’을 취한 대가로, 한국이라는 핵심 우방의 신뢰 상실, 실질적 군사 협력 기회의 축소, 내부 정치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됐다.

북한군 송환과 전격 공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대응 평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단기적 전술은 서울에 상당한 외교·안보적 부담을 지웠다. 특히 국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 굴종이자 외교 참사”라는 비판과 공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냉철한 안보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견지했던 초기 비공개 방침과 이후의 단호한 대응은 아래의 측면에서 나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비공개 처리는 굴종이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인도적 책무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 역대 모든 정부를 막론하고 제3국을 통한 탈북이나 귀순 공작은 당사자의 안전한 정착과 현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철저한 침묵’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왔다. 송환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표되는 순간 북한에 남겨진 포로들의 부모와 형제는 가혹한 처형이나 정치범수용소 감금이라는 연좌제의 희생양이 된다. 포로 본인의 생명과 북한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중대 사안을 선전용 재료로 활용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한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헌법적 가치이자 인도주의적 의무라 할 수 있다.

둘째, 외교적 신의를 깬 쪽은 우크라이나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명백히 원칙적 유감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했다. 양국의 공식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무선 간에 비공개 양해가 존재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이를 특정한 전략적 목적을 위해 다자 무대에서 일방적으로 소비한 것은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 훼손 행위다. 앞서 소개한 우크라이나 내부의 비판도 사태의 본질이 한국 외교의 무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권력 핵심부의 포퓰리즘적 조급증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주한 대사대리를 초치하여 단호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지극히 정당한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원칙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셋째, 진정한 안보가 과도한 치적 홍보가 아니라 은밀하고 치밀한 정보 자산화에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북한 정규군 포로는 단순한 인도적 수용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러시아-북한 간의 최신 지휘통제 체계, 전선 내 소통 장애, 통신 보안 실태, 북한군의 전술, 드론 활용 기술 등을 생생하게 증언해 줄 군사 정보 자산이다. 이 정보는 고도의 보안 속에서 정밀하게 복기·분석될 때 한미연합 대북 억제력의 핵심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송환 사실을 치적의 홍보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상대국을 복수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전술적 취약점 보완 동기를 제고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고려사항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이미 공론화된 조건에서 사태를 감정적으로 악화시키거나 국내 정쟁의 늪에 빠뜨리는 것은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정부와 외교·안보 당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첫째,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몰입과 정쟁화를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대북 굴종론이나 정권 비판의 도구로 소비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멈춰야 한다. 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헌법 제3조에 근거한 대한민국 국민의 수용이자 인도주의적 보호 조치’라는 규범적 프레임으로 정립하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 요구나 청문회식 접근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둘째, 신병 관리와 정보 자산화 과정에서 엄격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송환된 두 명의 포로에 대한 정보 당국의 심문과 보호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 이들이 언론이나 대중 매체에 노출돼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순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

명분을 정당화해주고 한러 관계에 추가적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정밀한 전술 정보만을 차분하게 축적하여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내실을 다지는 ‘조용한 실리’ 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셋째,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세 관리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북 간 대화·소통 단절 기조를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하반기 트럼프-김정은 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회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절실하다. 우선, 군사 당국은 북한이 포로 송환을 트집 잡아 접경 지역 국지 도발이나 미사일 무력 시위 등 위기 고조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한미 공조를 긴밀히 유지하여 향후 실현될 수 있는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의 안보적 이해가 배제되지 않도록 선제적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에 우리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상호 레드라인 준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부 러시아 매체들의 왜곡 선전전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모스크바 당국에 “한국의 포로 인수는 헌법과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보호 조치일 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공급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러 양국이 상호 파국을 피하기 위해 설정해 둔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재확인하고 관리하는 실무적 유연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서 상호 신뢰 재구축과 재발 방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공개 합의 위반에 대한 유감을 분명히 전달하되, 감정적 지원 중단 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향후 인도적·재건 협력 및 정보 교류

과정에서 상호 신뢰와 합의 준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협력의 진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 덧붙여 현재 전선에 남아있는 북한군 관련 추가 상황 발생 시 동일한 외교적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프로토콜을 재정립해야 한다.

2026년 가을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젤렌스키의 유엔 연설은 자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절박한 정치적 승부수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대한 신뢰 훼손과 국내 정치적 논쟁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인키 어렵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을 두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내부의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지금 한국 외교·안보 당국에 요구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당장의 정치적 생색내기가 아니다. 엄혹한 국제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인도주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고, 침묵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실익에 주목하며, 요동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차분하게 통제해 나가는 냉철한 실용주의의 실천이 절실하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